

사장단 회의 연 후... 日 수출규제 속 역할론 주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

4개 사업부문별로 20일까지 진행
계열사 대표·임원 참석 전략 발표
'日 수출규제' 실마리 공개 가능성

롯데그룹이 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2019 하반기 VCM(옛 사장단회의)'를 시작했다.

일본을 방문했다 돌아온 신동빈 회장이 주재하는 이번 사장단 회의는 4개 사업 부문(BU) 별로 20일까지 진행된다. 16일 식품BU에 이어 17일 유통BU, 18일 화학BU, 19일 호텔&서비스 BU 순이다.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업군별 BU장 주재 하에 해당 BU의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한다. 각 사별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 및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 방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신 회장은 VCM을 앞두고 열흘 이상 일본에 체류하며 노무라증권·미쓰호은행 등 현지 금융권 고위 관계자와 관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롯데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재

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일본통인 신 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얽힌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VCM을 통해 공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는 사업군별로 논의된 내용을 그룹 전반에 공유하는 20일 통합 회

의에 신 회장의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출근길에 일본 출장의 성과, 일본과의 가교역할 계획, 한국 내 일제 불매운동에 따른 사업상의 영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신 회장이 이번 사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도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직접 연관은 없다. 그러나 유니클로, 무인양품, 롯데아사히주류 등 일본 기업과 합작사가 많아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 이란 분석이다. 유니클로는 롯데쇼핑이 49%, 무인양품은 롯데상사가 40%, 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칠성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제품군 전반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있어 롯데 측은 촉각

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불매운동으로 롯데그룹의 시가총액이 2주 만에 1조원 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식품BU 첫 발표자는 민영기 롯데제과 대표였다. 민 대표는 국내 제과 시장 현황과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을 소개하고 중장기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3개월 전부터 준비했으며,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재무현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을 포함해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VCM에는 매각이 결정된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등 롯데의 금융부문 4개사도 참석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향후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금융부문 4개사가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SKT, 세계최초 '5G 로밍' 서비스

SK텔레콤이 스위스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스위스콤과 손잡고 오는 17일부터 세계 최초로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직원이 스위스 현지에서 5G 로밍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모습.

SK텔레콤이 스위스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스위스콤과 손잡고 오는 17일부터 세계 최초로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직원이 스위스 현지에서 5G 로밍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모습. /SK텔레콤

'기준금리 인하' 8월에 무게

美 연준, 이달 금리인하 확실히

오는 18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연 1.75%)될 지 또는 0.25%포인트 인하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8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이번 회의 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동결 하면서 인하 신호를 보낸 뒤 8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 하지만 인하 소수의견이 조동철·신인철 위원 2명으로 증가해 실질적으로 인하와 같은 양상이 될 전망"이라며 "수정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정부 목표 하향쪽만큼인 2.5%에서 2.3%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도 1.1%에서 0.9%로 하향해 금리 인하 시그널로 해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8월 인하를 기정 사실로 하되 동결을 사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연준에 앞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사례가 없고 정부의 정책 공조용 금리 인하 요구가 나온 상황에서 당장 금리 인하는 부담인 만큼 8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통화정책 여력을 감안했을 때 7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된 만큼 7월보다는 연준에 후행한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 기준금리는 연 1.75%로 낮고 사상 최저치와 격차도 50bp(1bp=0.01%포인트)에 불과하다"며 "금리 인하가 빨라질수록 미래 경기상황에 대한 정책 여력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7월 인하는 여력이 많지 않은 한국은행에 연내 추가인하라는 부담감을 남길 수 있다"며 8월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추경 이어 내년 예산에도 지원책 담을 것"

당청 '日 경제보복대책' 연석회의

"외교채널 활용 日 부당조치 알릴 것"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청(더불어민주당·청와대)은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부수석 등이 참석했다.

먼저 민주당 이 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며 "한일 양자 협의와 관련한 모든 외교 채널 활용해 일본 정부 부당조치를 알리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편입채권 대상 확대... 투자자보호 만전"

>> 1면 '상장주관사 규제풀어...'서 계속

예컨대 사모펀드 상장예정인 A기업 지분을 40% 보유하고, 증권사가 이 펀드에 10%를 출자하면 PEF계산방식으로 증권사 지분율은 4%가 된다. 하지만 헤지펀드일 경우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보유 지분을 합산하기 때문에 40% 지분율로 상장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방식으로 통합하고,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환자산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내 경제 체제가 근본적 혁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 극복하고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 실장은 "상황이 매우 엄정하다"면서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 부처는 가용한 모든 자원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 체제

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1단계는 외교적 경로 협의, 2단계는 중재위 구성이다. 정치권에선 한국 정부가 의견을 보일 경우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범위도 확대한다.

RP는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시간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채권을 되사오는 매매방식이다. 기존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편입채권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등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환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편입채권은 현행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국제기구 및 해외공공기관 발행 채권 및 국내 우량기업의 KP물로 확대한다.

안 과정은 "대상을 넓히되 등급이나

관련공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반고객이 대상인 만큼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한다.

안과장은 "K-OTC는 결제시 증권 및 증거금이 확보된 등록계좌로 자동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며 "소액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